

李 대통령, 오늘부터 G20 순방... ‘연대·평등·지속가능’ 논의

남아공, UAE, 이집트, 튀르키예
오늘부터 7박 10일간 4개국 방문

APEC 성과, G20서도 확산 논의
재정·기후변화 정책 협의 선도
국익중심 실용외교 다변화·다각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박10일간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방문국은 남아공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19일은 UAE 국민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뒤 21~23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4~25일엔 튀르키예 국민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G20은 G7(주요 7개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속한 므타(MIKTA), 사우디아라비아·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 중이며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재계 총수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1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2세션에선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인 23일엔 3세션에 참석해 ‘모

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을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G20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우리 정부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확산 논의되도록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여 달란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외에도 3개국 양자 방문 일정이 남아 있다. 이번엔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 순방을 통해 ‘평화·번영·문화’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의 호혜적 협력을 크게 증진하려는 것이 방문 목적이다. 또 한반도·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UAE는 국민 방문으로, 17일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민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19일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20일부터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 오후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후 재외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국민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레쥬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민 만찬 등을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일엔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하며 7박10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올해도 예산안 법정기한 넘기나... 與野 대립에 예비심사도 아직

조정소위, 오늘부터 심사 진행
예결위, 내달 2일까지 처리 목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17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문제는 일부 상임위원회 단위 예비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 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현·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처리 시한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

12월2일까지 처리할 목표로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2025년도 예산안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의 대거 삭감을 방침으로 하는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셈이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3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임위 단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

관 예산안 심사를 끝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일단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버리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편성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예비심사를 끝낸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한 31억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판단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단행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로 보고 있어 예결위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여야 간 대립이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이라며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조치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쟁점이다.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협의 안 되면 단독 진행”

“증인 신청 등 최대한 협의의 여지 있어”
검찰징계 관련 통합조정해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과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는데,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여야는 모두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별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대치하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그리고 기소 과정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한다.

이처럼 여야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G20 순방 기간 국정조사 관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김병기 원

내대표가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등 검찰징계 법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법안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통합조정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며 “저희가 이걸 기한을 정해 놓거나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해 놓진 않았다. 충분히 논의하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법 국회) 제출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국회 일정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원칙)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는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